민주 전격 등원 선언, 이젠 장내 전투

오늘부터 의사 일정 협의 착수
미디어법 직권 상정 충돌 예고

민주당이 결국 국회에 등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풀었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연석회의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결단했다"고 등원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국회 등원을 위한 선결과제로 내세웠던 5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등원을 선언한 것은 명분을 중시한 원외투쟁을 지속하기보다는 국회에 들어가 미디어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문제에 대한 입장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던 것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바뀐 것도 민주당의 등원 결정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을 선언함에 따라 한 달 열흘 이상 끌어온 6월 임시국회 파행사태는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13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국회 내 여야간 의견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2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2주 연장, 미디어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비정규직법과 관련, 정 대표는 "일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추경에서 마련한) 1천185억원 전환 지원금을 즉각 집행토록 해 더 이상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예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지, 법안 개정을 통한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 대표는 "디도스(DDos) 사이버 테러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4대강 사업, 시국선언 교사 처벌, 용산참사 문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문제 등 즉각적인 대책을 요하는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도 각종 현안 처리에서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일 오후 민주당 수뇌부의 등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 강기정(맨 오른쪽) 의원 등이 국회 중앙홀 점거에 사용됐던 현수막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野 '잠룡'들 기지개 켜나

정동영·김근태 등 盧 49재 이후 활발한 행보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야권의 '잠룡(潛龍)'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선 지난 4·29 전주 덕진 재선거를 통해 정계복귀에 성공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차기 주자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미디어 관련법 저지 등 다양한 공개 활동으로 존재감을 환기시키고 있다.

정 의원의 존재감이 뚜렷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정 의원의 복당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세균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주변에선 오는 10월 재보선 이전에 복당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재기의 칼을 갈고 있는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엔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통합을 통한 당내 기반 확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에 출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대표는 계속 춘천에서 칩거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수도권 지원유세에 나서면서 중앙무대로 복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인사들의 춘천 방문이 잇따르면서 10월 재보선을 통한 조기 정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회창·심대평 하마평… '충청 총리' 관심

李 대통령 순방후 '인적개편' 구체화
김무성 등 친박 인사 발탁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2단계 국정쇄신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적 개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 이후 여권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 작업이 마무리 된 단계며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 처럼 '인적개편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으로서는 대대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벌써 그럴싸한 하마평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충청 출신 총리와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입각 여부. 우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투 톱'이 모두 바뀔 경우 차기 총리 후보에는 비영남권 인사, 특히 충청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대통령실장에는 영남권 인사들이 경북 안동 출신인 김경한 현 법무장관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돌고 있으나 그가 '박연차 수사' 지휘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론한다.

친박 입각과 관련해선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발탁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시 3선의 정진석 의원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충청 출신인 데다 여야와 당내 계파를 광범위하게 넘나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은 김무성 의원 입각시 정무장관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 장관 교체시 임태희 최경환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이 각각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파트 구입자금 28억 출처 쟁점될 듯

오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3일 실시되는 천성관〈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대금 조달 의혹과 장남 병역특혜 논란, 공안통 출신의 경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박영선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 후보자가 올해 구입한 서울 신사동 H아파트 구입자금 28억7천5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두 의원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난해 6월 전세로 입주할 당시 동생과 처형으로부터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빌렸다. 올해 4월 구매할 때는 지인인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5억5천만원을 차용했다.

박 의원은 "천 후보자가 박씨에게 차용한 15억5천만원 중 8억원에 상당하는 차용증만 제출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 측은 당초 아파트 매입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하다가 "사과상자 20개가 넘는 현금"이라는 박 의원에 지적에 고액권 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와 관련, "직무 관련자나 사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 위반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의원, 지역현안 국고 확보 민생 탐방

지난 9~10일 한나라당 이정현〈사진〉 의원은 광주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호남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그가 고향인 광주를 방문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국고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했다.

이 의원은 9일 관계자들로부터 풍암 저수지에서 금당산을 잇는 생태통로 연결 프로젝트, 광주·전남 의병 합동추모 사당 건립, 내년 장성에서 개최되는 김인후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식 지원 등에 대한 경과를 청취했다. 모두 예산배정이 여의치 않아 중앙부처와 입씨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어 '담양군-광주시 통합위원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담양군은 인근 군보다는 광주시로 통합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를 듣고 즉석에서 한나라당 행정구역 개편추진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최근 전남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한 슬로시티 문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이 의원은 휴일인 12일에도 국회에 출근, 대책마련에 몰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